

尹 “모든 것 제 불찰, 제 부덕의 소치”

용산 대통령실서 대국민담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사실상 활동 중단”
명태균 관련 논란에는 “부적절한 일 한적 없어”
특검엔 “사법 아닌 정치 선동”... 거부권 시사

“알맹이 없다”·“동문서답”... 야권은 비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 최근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특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매사에 최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챙기고 또 살피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씨 관련 논란에 대해 제한 없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김 여사 활동은 사실상 중단했다”며 “특검은

사법 아닌 정치선동”이라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로 제기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난장판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지지율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변화와 쇄신과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하차 여론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야당이 비판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총평했다.

이성운 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며 “나라일에서 손을 떼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한마디로 국민 속 더 지는 동문서답이었다”며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끝이 났다”며 “국민께서 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지역아동센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아동센터의 제대로 된 호봉제 실현과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돌봄기관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같은 돌봄 업무를 하는데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경력과 호봉 인정의 차별이 있고 임금수준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중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도 이 실태를 알고 있지만, 방치하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특히, 17개 지자체 중 특히 전북 지역은 정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 상한선도 서울, 인천은 31호봉이나 전북은 10호봉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북은 10호봉 상한제를 풀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은 복지부 30% 지방비 70%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수준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은 돌보는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책임 있게 돌봄노동자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를 만들고 돌봄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임금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오늘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내달 13일까지 36일간...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8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2024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정례회 개최식은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된다. 둘째 날인 9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 제안 창구를 운영, 19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 예산안 심의 등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행정사무감사에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를 꼼꼼히 따지고, 간혹 재정이지만 민생을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민방의 준비를 해왔다.

/이만호 기자

국제 디지털성범죄 공조 강화

국힘 조배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증멸실 방지법’ 발의
“증거보전요청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 등에 큰 역할 할 것”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허위 영상물은 △156건(2021년) △160건(2022년) △180건(2023년)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허위 영상물 사건 수는 총 812건으로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8월 28일~9월 25일) 한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36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사이버범죄의 억압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 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 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기간 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입법 이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협약당사국 간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소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전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편이 영상을 전송하면서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경우, 이에 걸을 먹은 피해자가 영상과 대화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통신 내용 보관 기한인 3월 이내에 보전요청을 하여 영상과 대화내용을 보전해 추후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많은 범죄에 활용되어 왔던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보전조치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최근 들어 각종 법정행위권에 협조하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어 향후 협약을 통해 텔레그램의 정보 보전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더불어 증거 보전 요청제도 도입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 할 것”이라며 “사이버 성폭력도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민주 전북도당, 10일 김제서 발대식... 11~28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국 규모의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당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 전북 발대식은 오는 10일 전북 전주김제원주축협 김제지점 앞에서 개최된다.

오후 1시20분에 시작돼 발대사,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전북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고, 중앙당에서 한준호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참석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전북 도민의 뜻을 모을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국정개입 등 국정농단에 대한 강한 규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를 비판하고,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전북 도민 요구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28일까지 서명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며, 전북 각 지역위원회에 서명운동본부를 마련해 현장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참여가 가능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정음의 맛 상화차

찬바람 불면 정음 상화차로 건강 챙기세요!

정음시